

고건 대선 불출마 선언

“올 것 왔다”... 호남민심 어디로

‘민주개혁세력 대통합’ 압박 거세질 듯  
대선구도 ‘한나라 vs 反한나라’ 전망

고건 전 총리의 전격적인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2007년 대선 구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통합신당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계개편의 흐름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편과 대선구도의 새판짜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고건 전 총리의 중도 사퇴는 호남 민심을 중심으로 한 민주세력에 위기감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호남 민심의 위기감은 범 여권의 대통합을 이루려는 여론을 형성하면서 대선구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당+고건+민주당=통합신당’ 등식으로 진행되던 여권의 정계개편 방향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의 한 축이었던 고건 총리가 무너짐에 따라 정계개편은 백지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호남 민심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에 민주개혁 대통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호남권 주자이지만 자리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정동영 전 의장의 백의종군을 통해 김근태 의장의 동반 사퇴를 이끌어내면서 민주개혁 대통합의 새로운 출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광주시장 불출마 선언과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전국적 자원봉사조직망을 구성하고 있는 강운태 전 의원도 고건 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광망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도 보다 적극적인 통합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모 의원은 “민주개혁 대통합의 수순은 이제 정동영, 김근태 전 현직 의장의 과감한 백의종군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제 정계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호남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6일 오후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고건 전 총리의 대선 출마포기 기자회견이 지지자들에게 의해 지지되자 고건 총리가 승강기를 이용해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與 의원들 외면에 연말부터 고민  
지지율 급락·통합신당 부진 작용

■ 불출마 선언 배경

고건 전 국무총리가 16일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상당히 오랜 고민의 결과물로 보인다. 고건 총리는 지지율이 대폭 하락할 조짐을 보였던 지난해 말부터 불출마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신인들의 말만 듣고 정계개편 작업에 뛰어든 게 잘못이었다”며 “국회의원들은 고건 총리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 50~60명씩 달려들더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못본 척했다”고 ‘열람세제’에 혀를 찼다.

한 측은 “정신인들의 말만 듣고 정계개편 작업에 뛰어든 게 잘못이었다”며 “국회의원들은 고건 총리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 50~60명씩 달려들더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못본 척했다”고 ‘열람세제’에 혀를 찼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정계개편 정국이 더욱 복잡해진 것도 고건 총리의 불출마 결심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노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발언으로 인한 ‘전무후무’한 공방도 고건 총리에게 상당한 ‘흠결’을 남기면서 정치판에 회의를 갖게된 계기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있다.

정계개편 논의가 지연된 것도 그의 불출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건 총리는 지난 10.26 재·보선 이후 열린우리당 내에서 정계개편론이 제기된 지 11월 2일 기자간담회를 자칭해 “국민대통합신당의 주춧돌이 되겠다”며 정계개편의 깃발을 들었다. 이후 고건 총리는 2

개월동안 국민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원탁회의의 구성을 목적으로 우리당과 민주당인사들을 접촉했지만, 진전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고건 총리는 정치권내 ‘친고건파’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해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갖게 됐다는 후문이다.

한 측은 “정신인들의 말만 듣고 정계개편 작업에 뛰어든 게 잘못이었다”며 “국회의원들은 고건 총리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 50~60명씩 달려들더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못본 척했다”고 ‘열람세제’에 혀를 찼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정계개편 정국이 더욱 복잡해진 것도 고건 총리의 불출마 결심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노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발언으로 인한 ‘전무후무’한 공방도 고건 총리에게 상당한 ‘흠결’을 남기면서 정치판에 회의를 갖게된 계기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있다.

정계개편 논의가 지연된 것도 그의 불출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건 총리는 지난 10.26 재·보선 이후 열린우리당 내에서 정계개편론이 제기된 지 11월 2일 기자간담회를 자칭해 “국민대통합신당의 주춧돌이 되겠다”며 정계개편의 깃발을 들었다. 이후 고건 총리는 2

97년 조순, 이회창 후보에 대권 양보  
2002년 이인제·정몽준, ‘노풍’에 무릎

■ 대선레이스 중도하차 사례

고건 전 총리가 16일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 한국 정치의 대권 도전사에 ‘중도포기’ 사례를 하나 더 보탤 것이다.

지난 97년 대선 당시 조순 전 서울시장 은 김대중 후보의 국민회의가 떨어져 나간 민주당의 대권후보로 나서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전문가 이미지와 안정된 이미지를 무기로 한데 지지율을 25% 선까지 끌어올리며 유력 대권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지지율이 하락하자 대선(12월18일)을 한달여 앞둔 11월말 신한국당과 합당했다. 그는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에게 대권을 양보하는 대신 당권을 보장받았다. ‘영원한 2인자’로 불리는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도 97년 대선 당시 자민련 후보로 대권 행보에 나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김대중(DJ) 당시 국민회의 총재와 손잡는 결단을 내리면서 대권레이스에서 하차했다. 소위 ‘DJ 연합’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었다.

지난 2002년 대선 정국에서는 더욱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는 ‘이인제 대세론’을 앞세우며 당내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렸지만 국민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가져온 ‘노풍’의 위력에 무릎 꿇으면서 결국 당 경선 도중에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2002년 대선 막바지에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간 단일화가 최대 쟁점이었다. 두 사람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고, 결국 대선을 한달도 남기지 않은 11월25일 노무현 후보가 후보보탈과 여론조사에서 승리해 정몽준 후보를 제치고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지지도 1위 못 지키고 2년만에 ‘대권 꿈’ 접어

■ 고건 등장서 퇴장까지

고건 전 총리의 불출마 선언은 고건 총리가 총리를 퇴임한 후인 지난 2004년 말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도 1위에 오르며 정치권에 모습을 드러낸 지 꼭 2년여만이다.

고건 총리가 범여권 대선주자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하반기, 당시 신중식 의원과 안영근 의원 등이

이른바 ‘고건 대망론’을 내세우며 불을 붙였다. 당시 고건 총리는 30%대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제치고 선두를 질주했다.

고건 총리는 지난해 우리당 2·14 전대에서 ‘범민주개혁 통합론’이 이슈로 부각되고 민주당의 거듭된 영입제제가 이어지면서 대선주자로서의 입지에 탄력을 얻었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내에서 친 고건파를 형성했다. 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지

역 기반을 가진 고건 총리의 ‘역할론’이 여론내에서 부상한 것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다. 고건 총리는 지방선거 불개입을 선언하고 정치권의 ‘리브롤’에 일일 응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압승했고 고건 총리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할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 됐다.

고건 총리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0%대 초반으로 하락하면서 한나라

당의 선거 승리를 이끈 박 전 대표에게 1위 자리를 넘겨줬고 7월 들어서는 이 전 시장에게도 추월 당해 3위로 하락했다.

그렇지만 고건 총리는 소극적인 대선 행보를 계속하며 ‘정치인 고건’의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못했고 새해 들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대 아래로 추락하기도 했다.

이는 고건 총리가 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총리 기용은 “인사 실패”라고 밝힌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던 점, 또 정몽준 전 서울대 총장 등이 범여권내 대안 후보로 부각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여수국가산업단지'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featuring logos of various companies and the text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여수국가산업단지'.